

<개혁 '98 : 화학경영을 혁신하자>

“ 헛갈리는 정부의 경제정책 ”

정부는 98년8월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주민세를 포함 현행 22%에서 24.2%로 올리고, 세금우대저축의 한도액을 1인당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한다.

또 7월말부터 휘발유 교통세는 리터당 현행 591원에서 691원으로 100원, 경유는 110원에서 190원으로 80원 각각 인상해 휘발유 가격을 현행 리터당 1090원에서 1190원 수준으로, 경유는 487원에서 567원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특히, 7월중으로 내구소비재의 특별소비세율을 30%씩 인하, 승용차 특별소비세율은 현행 배기량별로 10 20%에서 30% 감소한 7 14%로 하향 조정하며, 에어컨은 30%에서 21%, TV 및 냉장고, 세탁기, VTR, 오디오 등은 15%에서 10.5%, 피아노는 10%에서 7%로 각각 낮추어 구입자 세금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자소득세 및 교통세 인상에 따라 98년 7000억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걷히는 반면, 특별소비세율 인하와 세금우대저축 가입한도 확대로 1000억원 정도의 세수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이자소득세 및 교통세를 올리고, 대신 내구소비재의 특소세를 인하키로 한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고 실물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반된 양면치방으로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자소득세 및 교통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대가 그리 신통한 것이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고, 특소세 인하를 통한 국내수요 진작책도 IMF체제로 얼어붙은 소비자의 구매심리를 얼마나 자극하게 될지 미지수이다. 그 정도의 소극적 대응책으로는 경기부양도 세수확대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높인다는 비난을 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정부·여당에 정공법을 택하라고 권하고 싶다. 미시적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보아 경제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조금 더 심사숙고해 달라는 것이다. 즉,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4고1저로 일컬어지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해결하는 처방이 나와야 할 것이다. 고지가, 고금리, 고임금, 고물류비, 저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대책이나, 내구소비재 특별소비세 인하는 경쟁력 제고 대책에 상반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도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졸속대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둘째, 경기부양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과소비를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를 입안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민소비수준이 지극히 정상적이거나 아직도 거품이 완전히 빠지지 않았다는 자가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특소세 인하는 불필요한 것이고, 교통세도 20~30% 인상할 것이 아니라 교통세를 100~150% 인상하고, 자동차 환경오염세를 신설해 100~150%를 부과함으로써 자동차로 인한 과소비를 추방하고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98년 1~3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8%를 기록한데 이어 연간으로도 -4%까지 추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과소비가 총소비의 30%에 이르렀다고 볼 때 GDP성장률이 4% 감소한 것은 심각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오히려 과소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저효율 및 저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 및 공공부문의 대폭적인 개혁과 아울러 대대적인 사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저효율의 대표주자가 정부조직 및 공무원 사회이며, 저생산성의 보고가 공공부문이라는 관점에 동의한다면 금융권이나 사기업의 퇴출이나 구조조정에 앞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및 퇴출이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5개 퇴출은행 임직원들의 반발이 당위성은 없으나 스스로가 희생양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떡」을 가로챈 상대는 활개치는데 「콩고물」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배신감의 표현인 것이다.

「4고1저」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기반 수술 및 이에 대응한 경기활성화 대책이 절실한 때이다.

<화학저널 1998/7/13>